

전세버스聯, '전용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연구용역 착수

☞ 정규호 기자 | Ⓞ 승인 2025.01.24 10:52

1월 20일 국토부·교통정책경제학회와 연구 착수보고회 가져
차고지 조성 시, '친환경 차·불법 주정차' 해결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모습. 사진=전세버스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오성문, 이하 연합회)는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교통정책경제학회와 '전세버스 전용 공영차고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전세버스도 시내버스, 화물차처럼 '전용차고지'를 확보하는 연구다. 인허가권자인 국토교통부까지 참석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차고지 확보를 통해 '차고지 부족'과 '친환경 자동차 도입'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지 주목된다.

연합회는 1월 20일 연합회 및 시도조합 임직원,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수행기관인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연구팀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전세버스 차고지 운영에 대한 현 실태의 정확한 진단, 타당성 조사 등 전반적인 시장 실태 진단을 통해 공영차고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연구용역기관은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하헌구 박사)가 맡았다. 연구용역기간은 4월 말까지이다.

본지가 입수한 연구팀의 착수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용역추진 주요내용은 크게 5가지다.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근거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 파악 ▲전세버스 차고지 운영실태 분석 ▲관련 법규 및 유사사례 검토 ▲전국 16개 기초단체 차고지 설치 운영을 위한 부지현황 등 지자체 환경 정확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공영차고지 설치 방안 도출하고 효과적인 추진방식 및 중장기 설치계획 등이다.

'차고지'는 전세버스업계의 숙원 과제였다. 전세버스 수요는 커지는데, 도심은 과밀개발되면서 도심 차고지는 날날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전세버스의 도시권 내 임대차고지 비율은 85.9%다. 차고지 확보문제로 사업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한 주거지·이면도로 밤샘 주차, 불법 주정차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차고지 조성 추진은 오성문 회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버스와 화물차는 정부에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유독 '전세버스'만 없는 상황이다. 수소전기 등 친환경 자동차 조기 도입, 안전 문제,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인 만큼 오 회장이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를 추진했다.

연합회는 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자 및 조합 임직원으로 구성된 TF팀도 꾸리는 중이고, 3월 중 국토부와 시·도 관계자 정책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인허권자는 국토부지만 실제 차고지를 조성해야 하는 곳은 지자체이므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겠다는 전략이다.

오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영차고지 조성이 이뤄진다면 업계의 경영개선은 물론 도심 교통환경 개선, 주민 민원 해소, 운전자 휴게시설 등 운수종사자 복지향상, 친환경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세버스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장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규호 기자